

의안번호	제270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10월 일 (제343회)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5년 10월 19일

##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70
----------	-----

제안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였고,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 됨
-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내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 (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 재고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창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통일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지원부장관 외교부장관

#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지금 우리의 농촌 들녘은 수확기를 맞아 황금물결로 출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 봄 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또한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8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밥쌀용 쌀 1만 톤 수입계획을 발표하였고, 또다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로 낙찰됐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함께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이에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재고 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5. 10. 2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